

전북특자도 특별법 '첨단소재 융복합화·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

전북 기존 산업에 '생명경제' 불어넣는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특례'와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거점 지역으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친환경 운송수단 선도 경쟁력 강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올해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 투자를 신희탄으로 LG화학·화유코빌트, 엔켄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앞으로 전북특별법과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무인인도차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제52조)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는 전북에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해 대체부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이용촉진(제53조), 새만금 무인인도차 산업 육성(제54조) 특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자에서 택시 등 구역형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드론 등 무인인도차 종합심사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주

행자동차 및 무인인도차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은 다수의 드론 기업(315개사)과 드론의 실증을 위한 비행공역을 확보하고 있고, 탄소복합재,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드론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지난해 8월 공모 선정)와 연계한 미래 신교통수단 연구·실증이 가능해 관련 특례가 반영될 경우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핵심특례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향유·활용하고 있는 대표지역인 전라북도를 케이(K)-문화관광의 국제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감사원 사무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법원 판결 통해 확인”

민주 윤준병 의원 “주식 백지신탁 의무 회피하려 행정소송 제기, 감사할 자격 없어…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공수를 찾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2024년 정부의 농업예산안과 관련해 빈 수레만 요란한 속 빈 강정이라 말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예산은 여전히 국가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업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는 53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66%인 185억원이 각각 삭감됐고, 2021년 ‘요수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금 1천억원이 아예 삭감됐다.

윤준병 의원은 “쌀 가격안정비 또한 작년 대비 3,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양곡 매입량은 45만톤으로 겨우 5만톤을 늘렸는데,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쌀값 80kg 20만원 초저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급선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논농 등 논작물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추수 전 조기집행도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으로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 전북인비상회의, “대정부 투쟁 수위 강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멤버리 진실규명 간담회

전북도의회 새만금대응단(단장 국주영)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멤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범도민결의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부안) 위원장과 위원,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전북에향본부 총재), 조지훈 사무총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국가 예산삭감 법률 위반사상 관련 소송은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 국정감사와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 없는 예산심사 보이콧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확정을 위해 도민결의대회는 물론 국회 예산심의 전 100만 도민이 서울에 상경해 범도민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정부 투쟁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시기와 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멤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변 호사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허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투쟁하자”고 부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간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활동하며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도민들께서 총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면 반드시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멤버리 사태의 책임 역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은 “정부가 잘못

한 멤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한 것도 부족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멤버리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

“정부, 전북·새만금에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하라”

나인권·최형열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과 최형열 부위원장(전주5)이 14일부터 서울간 도의회 청사 앞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두 의원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은 180만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관련 예산을 살리는 데 도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들은 이어 “멤버리 피해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 당시 유엔버터를 퍼뜨려 조선인을 학살했던 일본이 떠오른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예산으로 특정지역을 옥죄는 경우는 없는 만큼 정부여당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최형열 부위원장이 14일부터 서울간 도의회 청사 앞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은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자세를 거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4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9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9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정읍 정산중학교 1~3학년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일본 자유발전', '조례안 제정', '토론'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주제는 성교육과 언어폭력 대처방안이었으며, 인권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대변했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쌀·농수산물 가격 정상화

민주 안호영 의원,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 발의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미안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충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타지역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충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지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회 농해수안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충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

전북도 업무제휴·협약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서남이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서남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재훈 기자